

제2단계 5차 6자회담 종결과 2007년

전 현 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2월 18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시작된 제2단계 5차 6자회담이 22일 의장성명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애초부터 금번 6자회담에서 당장 북핵 폐기와 북한체제 인정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단번에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없었다. 10월 9일 북핵 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았던 상황에서 주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한자리에 앉은 것만이라도 다행이라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금번 회담에서 6자회담이 깨지지 않고 모멘텀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 주요 당사자인 북미 양국은 19일과 20일 양일간 베이징 미국대사관과 북한대사관에서 BDA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절충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당장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의 기본입장을 청취한 후 2007년초 뉴욕에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BDA 실무회의는 종결되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합법자금 해제 문제와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 및 책임자 처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본회담에서는 미국이 핵폐기를 위한 '초기이행조치'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상응조치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수정안'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북핵폐기를 위한 4단계의 과정 즉, '동결-신고-검증-폐기'와 이에 따른 여타 5개국의 상응조치다. 미국의 방안은 ① 동결 단계(영변 5MW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핵프로그램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에서는 서면화된 체제안전보장이나 종전협정 서명 등 주로 북한의 안전보장 조치가 제공되고, ② 신고 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동결 단계에서도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추후 구성될 워킹그룹에서 다루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지원 문제도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선 제재 해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과 사찰 수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금번 6자회담이 쉽게 타개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미간의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체제 붕괴를 위해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마약, 위폐, 생화학,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다양한 카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최후저지선'으로 삼아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은 '악'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핵 폐기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북한의 약속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07년'이라는 연도가 매우 의미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2007년이 김일성 생일 95주년, 김정일 생일 65주년, 김정일 공화국 원수 취득 15주년, 당총비서 취임 10주년, 인민군창건 75주년 등 소위 '껴어지는 해'가 여러 가지 겹쳐지는 해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기는 매우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따라서 2007년에는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김정일 치적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 자신이 뭔가 가시적인 치적을 남겨야 되는 데 북한주민들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안보와 경제이다. 안보는 미국으로부터 획득해야 하고, 경제는 중국·남한·일본 등 주변 여러 국가들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이고, 그 핵심은 핵문제이다. 북한이 핵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로 북한체제나 김정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김정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IAEA 사찰단 입북, 5Mw원자로 동결, NPT 복귀 등을 시행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획득하는 일이다. '김정일식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미 1998년 대포동1호 발사 이후 EU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편 경험이 있다. 따라서 금번에도 핵보유의 여세를 몰아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실시할 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6자회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중지로 인해 남북관계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2007년을 '여명(黎明)의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설정하려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적 사안이다. 비록 북한이 남한을 '미제괴뢰'로 인식하고 '한줌도 않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고는 있지만 이제 남한은 더 이상의 미국의 하수인도 한줌의 모래알도 아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8위의 군사대국이다. 남한을 무시하고는 북한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민족공조'를 명분으로 2007년초부터 대남 적극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구사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지만 북미관계가 개선된다할지라도 경제난 해결의 실제적 지원자인 남한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2007년은 남한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남한 정부의 선택폭이 넓지는 않지만 북한이 순수한 의미에서 민족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형식보다는 내용이 알차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최고 당국자간 핫라인 설치나 군인사교류 등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하는 사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추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야만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2007년은 남한에서는 대선이 치루어지기 때문에 남한도 한반도 안정을 필수적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 역시 부시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남한도 적절한 시점에 대북 지원을 재개해야 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도 복원시켜야 한다. 미국 또한 북한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로 대북 무력공격을 할 수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선택 폭도 넓지는 않다. 인도나 파키스탄에게 했던 것처럼 핵폐기가 불가능하다면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2007년을 남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는 해, 부시 행정부가 교체되기를 기다리는 해로 삼는다면 큰 재난이 닥칠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2007년을 북미관계 대타결의 해, 남북관계 응비의 해로 삼는다면 ‘강성대국의 여명’이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좀 더 포용력있는 soft power를 구사하는 강대국으로 변모한다면 많은 지구촌 국가들이 미국을 따를 것이고, 남한이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편다면 남북관계는 훨씬 화기애애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록 당장은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행동 대 행동’ 차원에서 핵폐기를 위한 대장정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낙관적 시나리오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은 ‘영원히’ 물건너가고 ‘제2의 1994년 6월’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